

배포

2023년 8월 25일 (금)

문의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대응팀장(민주노총)
정재현 010-3782-1871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하는 검찰 규탄 긴급 집회

○ **일시 : 2023년 8월 25일 (금) 오후 2시**

○ **장소 : 대검찰청 앞**

1. 취지

- 지난 8월 11일과 8월 17일 울산지검, 서울동부지검에서 S-oil과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지난해 5월 19일 S-oil 울산 온산공장에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이 전신 화상 등 부상을 입고, 3명의 노동자가 경상으로 치료받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검찰 수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온산공장 정유생산본부장 등 13명에 대해서는 기소했는데 S-oil 주식회사, 후세인알카타니 대표이사, 이민호 CSO(안전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 한 것입니다.
- 지난해 4월 LG전자 자회사 하이엑솔루텍 소속으로 에어컨 수리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했던 노동부는 하이엠솔루텍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서울동부지검은 사망 이유에 대해서도 노동자 과실로 인한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 재벌 대기업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 누장 수사, 소극적인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10대 건설 회사로 손꼽히는 DL이앤씨가 대표적입니다. DL이앤씨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7번째 중대재해 사고 발생으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재벌 대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심지어 기소 조차 시간을 끌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검찰을 규탄하며 긴급 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언자
14:00	개회 및 민중의례	- 사회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14:05	여는 발언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박석운 공동대표(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14:10	투쟁 발언 ① 검찰의 에스오일 중대재해처벌법 무협외 불기소 규탄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이태의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14:15	투쟁 발언 ② 중대재해 다발 기업 DL이앤씨 기소 조차 하지 않는 검찰 규탄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 운동본부 박수정 집행위원장 (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14:20	문화 공연	- 문화일꾼 연영석
14:30	투쟁 발언 ③ 반복되는 SPC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업정 수사 및 즉각 처벌 촉구	- 민변 권영국 변호사
14:35	투쟁 발언 ④ 충북 오송 참사 중대재해처벌법(중대 시민재해) 적용 및 책임자 처벌 촉구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오민애 변호사
14:40	문화공연	- 서울대 몸짓패 골패
14:50	자유 발언	- 집회 참가자 자유 발언
15:00	투쟁결의문 낭독	- 집회 참가자

3. 투쟁 결의문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 25일 민주노총,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생명안전행동은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능장 수사, 소극적인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당시 검찰의 업정 수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20,677명의 노동자 시민 서명과 항의서한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기자회견 이후 검찰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노동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울산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8월 11일 에스오일(S-oil), 8월 17일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영책임자를 무혐외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울산지검은 후세인알카타니 에스오일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안전보전에 관한 전권을 이민호 CSO(안전경영책임자)에게 위임했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 특히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CSO를 임명하여 경영책임자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들에서는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경영책임자로부터 안전보전에 관한 업무 전권을 위임받은 CSO가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뒤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 22곳 모두 경영책임자(대표이사)를 기소해왔다. 그런데 에스오일에 대해서는 종전 검찰의 입장과 정반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6개월 이내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반기 1회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경영책임자의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의무도 해당되지 않아 CSO에 대해서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법에 따라 중대재해 기업을 엄정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검찰이 이전 결정과 달리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고 재판부에서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조차 없는 결과를 낳고 있다. 울산지검에 이어 서울동부지검에서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고, 수사 결과 중대재해 원인을 노동자 과실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관할 노동청에서 하이엠솔루텍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기소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검찰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과연 이 나라 검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여당 국민의 힘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불필요한 '킬러규제'를 없애겠다며 내년 1월부터 확대 적용될 50인(역)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기업에 의한 범죄라는 전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민사회, 산재재단 참사 피해 유가족의 투쟁으로 제정된 법이다. 검찰이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한다면 말이 아니라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기소, 처벌로 실천해야 한다. 검찰이 미온적으로 나오는 동안 수백 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DL이앤씨(옛 대림건설)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건의 중대재해로 8명의 노동자가 떨어지고 깔려서 죽어 나갔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현대비엔지스틸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개악하려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맞서 중대재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받고,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

2023년 8월 25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4. 첨부 자료

※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및 재판 현황 (8월 25일 오전 기준)

연번	사업장명	재해발생연월일	노동부 기소의견 송치	검찰 기소	재판 상황
1	(주)삼○○○○	2022-01-29	2022-06-13	2023-03-31 의정부지검 삼표그룹 회장 기소	
2	평○○(주)	2022-02-09	2022-10-27	2023-02-14 대구지검 서부지청 대표이사 기소	
3	두○○(주)	2022-02-16	2022-04-11		

연번	사업장명	재해발생연월일	노동부 기소의견 송치	검찰 기소	재판 상황
				2022-06-27 창원지검 대표이사 기소	
4	삼000(주)	2022-02-19	2022-05-31	2022-11-31 창원지검 통영지청 대표이사 기소	
5	제000(주)	2022-02-23	2022-09-19	2022-12-30 제주지검 대표이사 기소	
6	(주)태0000	2022-02-26	2022-07-26	2022-12-29 춘천지검 대표이사 기소	
7	(주)우0000	2022-02-24	2022-05-23	2023-06-05 청주지검 대표이사 기소	
8	건000(주)	2022-03-09	2022-05-31	2022-11-30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대표이사 기소	
9	(주)시0000	2022-03-16	2022-05-11	2022-12-29 인천지검 대표이사 기소	2023-06-23 인천지방 법원 1심 선고 시너지건설 대표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선고 시너지건설 법인 벌금 5천만 원 선고 2023-07-03 인천지검 항소
10	한000(주)	2022-03-16	2022-05-17	2022-11-03 창원지검 마산지청 대표이사 기소	2023-04-26 창원지법 마산지원 한국제강 대표이사 징역 1년 선고, 법정 구속 한국제강 법인 벌금 1억원 선고 2023-07-12 한국제강 항소로 인해 항소 심 진행 2023-08-23 한국제강 항소심 선고에서 1 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11	성000(주)	2022-03-25	2022-11-03	2023-05-08 부산지검 대표이사 기소	
12	(주)제0000	2022-03-25	2022-08-04	2023-06-02 서울중앙지검 대표이사 기소	
13	(주)엘0000	2022-03-29	2022-05-06	2022-10-19 대구지검	

연번	사업장명	재해발생연월일	노동부 기소의견 송치	검찰 기소	재판 상황
				<u>대표이사 기소</u>	
14	국000(주)	2022-04-15		2023-06-14 서울북부지검 <u>대표이사 기소</u>	
15	현000(주)	2022-04-20		2023-05-22 광주지검 순천지청 <u>대표이사 기소</u>	
16	(주)온0000	2022-05-14	2022-06-29	2022-12-29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u>대표이사 기소</u>	2023-04-06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심 선고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원청 법인 벌금 3천만원 선 고 2023-04-16 온유파트너스 대표, 검찰 돌 다 항소 포기하면서 1심형 확정
17	만000(주)	2022-05-19	2022-08-25	2022-12-29 창원지검 마산지청 <u>대표이사 기소</u>	2023년 8월 25일 1심 선고 결과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천만원
18	(주)신0000	2022-05-26		2023-05-08 울산지검 업체 대표 기소	
19	(주)홍0000	2022-06-08	2022-12-06	2023-03-17 대구지검 서부지청 <u>대표이사 기소</u>	
20	(주)엠000	2022-07-14		2022-12-27 울산지검 <u>대표이사 기소</u>	
21	(주)동0000	2022-03-08		2023-07-21 대전지검 원청 대표이사, <u>협력업체 대표이사</u> 기소	
22	정000(주)	2022-09-15		2023-07-28 대구지검 서부지청 <u>대표이사 기소</u>	

에쓰오일 밸브정비작업 중 폭발, 화재로 1명 사망, 11명 부상 중대재해.

대기업 봐주기, 눈치보기, 사법 정의는 존재 하는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앞장서는 울산지방검찰청을 규탄한다!

2022년 5월 19일 20시 51분, 울산 울주군 온산을 에쓰오일 공장에서 알킬레이션 공정 밸브 정비작업 중 부탄가스 누출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무려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지진과 같은 진동을 느꼈고 불기둥이 수십미터를 치솟고 밤새 타올라 울산지역 노동자와 시민들은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 사고로 39세의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전신 화상 등 부상을 입었고 3명의 노동자가 경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2022년 울산지역 최악의 중대재해로 기억되는 에쓰오일 중대재해는 수사 결과 알킬레이션공정 안티씨지 밸브 정비작업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인화성 가스를 사용함에도 인화성 가스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고 화학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임에도 사전 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화학설비 개조와 수리 업무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대재해 발생 후 무려 15개월이 지난 2023년 8월 11일 울산지방검찰청은 에쓰오일주식회사, 후세인 A. 알카타니 대표이사, 이민호 최고 안전책임자(CSO)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로 불기소하고 에쓰오일 온산공장 정유생산본부장과 생산운영본부장 등 13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에쓰오일 중대재해 발생 시 유족과 피해자 가족들은 만나 사고 원인조사를 하고 지원활동을 했고 중대재해 근절 의지를 담아 부산고용노동청에 에쓰오일(주), 후세인 A. 알카타니 대표이사, 홍승표 에쓰오일 울산공장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함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와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중대재해 재발을 막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만들어졌다.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이며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공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케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을 처벌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누구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검찰이 앞장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행동에 우리는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

검찰은 에쓰오일 대표이사(후세인 A. 알 카타니)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그 근거로 ① 대표이사가 에쓰오일의 대주주인 외국기업이 선임한 외국인이라는 점 ②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최고안전책임자(CSO)에게 전부 위임하고 실질적·최종적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① 대한민국 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에쓰오일 대주주가 외국기업이라거나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라는 점이 면책의 사유가 될 수 없다 ② 형식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CSO)를 별도로 두더라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보지 않을 근거가 없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보고 수사 및 기소를 해온 종전 검찰의 입장에도 반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란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질의회시집), 대검찰청은 '법령에서 부과한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며, '안전보건 담당이사가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

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대표이사)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CSO로 선임된 이민호는 임원이나 이사가 아닌 부사장급이다. 대표이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형식상 선임된 자이다. 사업장 내에 형식상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을 CSO에게 위임하였다는 대표이사의 위임 전결규정이 있다거나, 형식상 최고안전책임자 지위로 경영회의에 참석한 것만으로, 대표이사에 준할 정도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이민호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물품 구매, 용역계약 체결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이민호는 간호사 채용 등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구성, 인력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어느 면에서도 보더라도 이민호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그나마 CSO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위험성평가, 중대재해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등 절차를 마련하였는데, 사고 현장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업에서 서류상, 형식상의 절차만 잔뜩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것이다. 에스오일은 2022년 5월 19일 대형 폭발, 화재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중대재해를 일으키고 나서도, 2023. 3. 19. 에스오일에서는 또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이처럼 유사한 폭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보더라도, 도저히 에스오일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찰은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반기 1회 점검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각종 점검 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모두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검찰이 2022. 1. 27.부터 2022. 6. 30.까지 사이에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 다른 중소기업에게 같은 이유로 면죄부를 준 사실이 없다. 오로지 대기업 앞에서만 다른 잣대를 들이민 것이다.

울산지방검찰청의 에스오일 대표이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발맞추어 대기업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엄정한 법 적용을 사명으로 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유독 대기업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어서 더욱더 심각함을 느낀다.

2023년 7월 25일 민주노총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 기소를 장기화하고 대기업, 지자체의 중대재해에 대해 단 한 건의 기소도 진행하지 않은 검찰을 규탄하며 지난 7월 한 달 동안 20,630명의 서명을 받아 대검찰청에 전달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오일 법인과 대표이사, CSO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법원의 판결조차 받아보지 못하게 차단한 검찰에 강력히 항의한다. 울산지방검찰청은 부끄럽지 않은가? 울산지방검찰청은 사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각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고 중대재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8월 21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자 노래패 노래마당,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동구주민회, 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산채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현충노동재해추방을 위한 모임)